
정책참고자료

2017-3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에 민·관이 힘 모은다	—————	4
2	국민권익위원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구현”에 기여	—————	12
3	기획재정부		
	2016년 시·도 경제협의회 개최	—————	17
4	교육부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21
5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대학 창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25
6	문화체육관광부		
	1년 먼저 만나는 평창올림픽, 강원도 겨울문화축제 속으로!	—————	32
7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대!	—————	39
8	환경부		
	2017년 환경정책자금 용자 신청, 접수 시작	—————	45

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사업 관련 궁금증,
한자리에서 해결하세요 _____ 52

10 여성가족부

전국 76개 여성친화도시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프로젝트' 추진 _____ 55

11 국토교통부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 안전강화 마련 _____ 60

12 해양수산부

해수부, 태풍 피해예방 위한 과학적 대응체계 강화한다 _____ 64

1

국민안전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에 만관이 힘 모은다

- 자발적 가입 유도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과태료 부과 유예-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국민안전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관계기관·단체 배포 및 CU편의점을 통해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 제작·배포 및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2.15~)하고
-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설에 가입인증스티커를 배부(3월~)하고 시설단체를 방문하여 해당단체의 보험가입을 설계해주며,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방재컨설팅*(4~6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 * 시설 안전점검 → 위험 분석·평가 → 위험완화방재대책 제시
-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17년 1월 6일 개정·공포되어 보험 가입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가입의무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하였다.
- 또한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국민안전처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면서 “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 밝혔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 가입대상시설 : 19종
 -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 :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 준용
- 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 추진배경

- 현행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 후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

* 화재보험('73, 대연각 화재), 유도선사업자보험('93, 서해페리호 사고), 청소년수련 시설보험('99, 씨랜드 화재), 다중이용업소보험('09,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 보장

□ 추진경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6.1.7)

-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대상, 보상금액 등 시행령 등에서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7.1.6), 시행('17.1.8)

□ 주요내용

- 대상시설 및 가입자

- (대상) 19종 20만여개소(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미술관,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 1층 음식점 100㎡ 이상 가입,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가입 의무

- (가입자)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 미 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및 보상내용

- (시행시기) '17년 1월 8일부터 신규 인·허가시설 적용,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 적용 7월 7일까지 가입

- (보상대상)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 피해는 10억까지 보상

* 사망·부상 등 신체 피해는 소득수준,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임

○ 각 기관의 역할

- (국민안전처) 상품 개발 등 제도 운영, 의무보험정보의 총괄관리

- (중앙부처) 각 부처 소관시설의 의무보험 운영 및 관리

- (지자체) 지자체 인·허가 시설의 의무보험 관리 및 과태료 부과

○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17. 1. 8부터 10개 보험사에서 판매 개시

*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손보, 동부,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계획

○ (국민안전처)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영상(30초, 2분) 배포 및 홍보(2~5월), '표어' 공모 실시 홍보 활용(하반기)

- '안전한 TV' 제작 홍보영상 관계부처·지자체·민간단체 배포, 'CU 편의점' 홍보

○ (손해보험협회) '재난보험 길라잡이'(리플렛) 지자체 및 민간단체 배포(5만부, 2월), '상담전용 콜센터' 운영(2.15~12월)

- 재난배상책임보험 해설, 가입자 Q&A를 담은 길라잡이 안내책자 제작

- 보험 적용대상 여부, 보험료, 보상 등 관련 상담전용 콜센터 서비스

○ (보험사) 보험가입 인증스티커(QR코드 포함,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로 연결) 제작·배부(3월~), 민간단체 설명회·교육 참여, 설계사 방문 가입설계 서비스(2~12월), 언론 기고 등

○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 안전점검 전문가 참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대책 제시 등 방재 컨설팅 실시(4~6월)

○ (부처·지자체) 가입대상시설 업무지침·교육자료 등에 보험 내용 반영, 신규 시설 인·허가 시 안내책자 배부, 소식지 등 제도 소개

참 고 1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영상

참 고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인증스티커(예시)



참 고 3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비교

- 재난의무보험과 일반 화재보험과는 손해보상 대상 등에 차이가 있음
 - 재난의무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 피해를 보상하는 것임

※ 보상대상 비교

구 분	재난의무보험	화재보험
제3자 인명피해	보상	미보상
제3자 재산피해	보상	미보상

참고 4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현황(7개부처, 17개법령, 19종)

* 대상시설은 '17. 1월 기준, 전수조사 실시 중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만개 이상 주요시설

- 1층 음식점(141,432), 숙박업소(27,931), 주유소(12,216), 15층 이하 아파트(14,752)

소관부처	관련법령	시설유형	시설현황		
			계	공공	민간
계	17개 법령	19종	201,985	1,519	200,466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	121	94	27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등록)	550	232	318
		미술관(등록)	213	50	163
	도서관법	도서관	981	960	2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시설	13	9	4
	경륜·경정법	경륜장	3	2	1
		경정장	1	1	-
		장외매장	20	-	20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27,931	-	27,931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례식장	1,088	54	1,034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경마장	3	3	-
		장외발매소	30	7	23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시설	14	1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주유소	12,216	-	12,216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창고	2,219	-	2,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297	21
	도로법 시행령	지하상가	101	73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시행령	15층 이하 아파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	14,752	-	14,75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100㎡ 이상)	141,432	-	141,432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아파트와 음식점 등 규모 제한 사유

- ① 15층 이하 아파트 : "16층 이상"은 「화재보험법(금융위)」 신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15층 이하"에 대해 도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된 사유는 가입주체(공동주택 관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
- ② 1층 음식점(100㎡ 이상) : 2층 이상(100㎡ 이상)은 「다중이용업소법」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1층 음식점에 대해 도입

참고 5

의무보험 도입 대상시설 보험료

대상시설	대표시설		100m ² 기준 연간 보험료
	규모면적(m ²)	연간 보험료(원)	
경마장*	60,000	10,500,000	20,000원
장외발매소*	10,000	249,000	20,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	1,000	340,000	34,000원
박물관	5,000	47,000	20,000원
미술관	5,000	47,000	20,000원
과학관	7,000	51,000	20,000원
도서관	1,000	24,000	20,000원
주유소*	1,000백만원	95,000	-
물류창고*	10,000	2,890,000	28,900원
경륜장*	50,000	8,750,000	20,000원
경정장*	10,000	1,750,000	20,000원
장외매장*	5,000	925,000	20,000원
장례식장	3,000	149,000	20,000원
전시시설*	90,000	3,258,000	20,000원
지하상가*	10,000	24,333,000	243,300원
국제회의시설*	90,000	3,258,000	20,000원
1층 음식점	300	28,000	20,000원
15층 이하 공동주택	100(세대당)	1,000	-
숙박시설	1,000	154,000	20,000원

※ 참조요율(8종)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장례식장, 1층 음식점, 공동주택, 숙박시설(대상시설의 과거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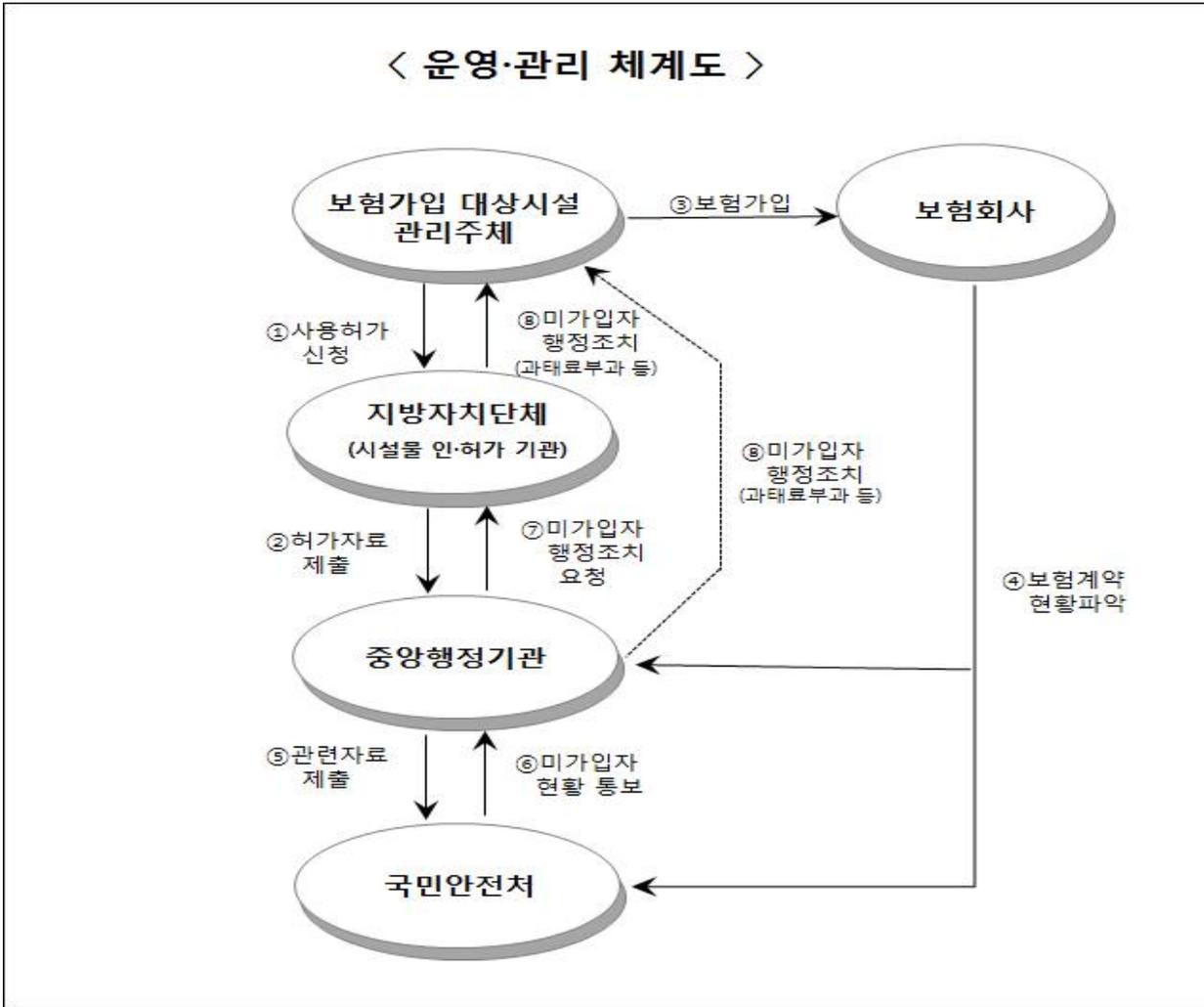
* 협의요율(11종) :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터미널,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재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보험요율 결정)

※ 주유소는 매출액 기준하여 적용

※ 최저보험료 2만원 적용 기준

참고 6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운영·관리 체계도



참고 7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판매보험사(10개사)

구분	보험사명	대표전화
상품명 (재난배상책임보험)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동부화재	1588-0100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농협손해보험	1644-9000

2

국민권익위원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구현”에 기여

-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및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추진
(행정심판법 개정) 등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 ◆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익신고자 책임 감면 범위 확대(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등
‘내실있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 ◆ 지자체 고충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 확대(‘16년 54개→’17년 145개),
민생경제 등 서민 실생활 밀접 분야 민원분석 등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정부5년차를 맞아 그간 추진해 온 국민권익 보호와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2017년 업무계획을 11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내실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

1. 민생고충 중점해소 및 현장중심의 민원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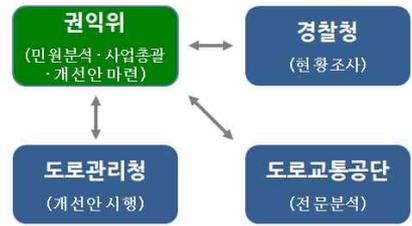
-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고충을 중점 해소하고, 서민과 영세기업 민원을 적극 처리한다.

서민생활 보호	기업피해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공단의 과도한 통장압류 • 공공금융기관의 무리한 채권추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역 등 부당한 공공계약 • 지나친 규제로 인한 현장애로 등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
 기획조사로 터널·교량 등
 특수시설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 교통안전 기획조사 협업체계 >



-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광역화하고, 새터민·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하는 등 이동신문고 운영도 활성화한다.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 확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질병·고령·장애,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 대리 대상 청구인 및 사건, 세부 대리 절차, 국선대리인의 자격 등 규정
------------------	---

*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조세심판원 등에서 국선대리인제 운영 중

- 청구인의 위법·부당성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증거조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접수 전담관도 지정한다.

* 현장 증거조사 : '16년 228회 → '17년 260회

< 내실있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

3.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 강화

□ 청탁금지법의 순조로운 정착으로 청렴한 사회를 구현한다.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법 시행 이후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간다.

권익위	· 각 분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제도적 보완 방안 연구
각 부처	· 업종별 피해분야 모니터링 및 대책 강구

-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집중교육 실시, 자체 교육과정 개설 지원 등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 제도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통령령)	·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체계화
------------------------	--

4. 부패행위 감시기능 확충 및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부정환수법」 제정(16.6월 국회제출)	· 허위청구 등에 대해 환수 외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 신고자 보호 및 보상(최대 30억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규제심사 중)	·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 화해권고 제도 도입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추진	·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

□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노력을 강화한다.

○ 금년도 청렴교육 의무화 본격시행에 따른 권익위-각급 기관-교육 훈련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 고위공직자·승진자 등 3천명 대상 집합교육 실시, 각급 공공기관 소속 20만여명 공직자 대상 사이버 청렴교육 실시, 청렴강사·교육 콘텐츠 적극 지원 등



○ 민·관 협업을 통해 청렴의식을 함양하여 청렴풍토를 조성한다.

반부패 네트워크	• 반부패 민관 협의체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확대(45개→50개)
기업	• 기업 반부패 가이드 보급 - 「계획 수립-규범 마련-실행-협력-평가·개선」 5단계 전략 제시 - 청탁금지법 관련 사규 마련, 신고자 보호절차 확립 등
미래세대	• 초중고 윤리·도덕 교과서에 청렴콘텐츠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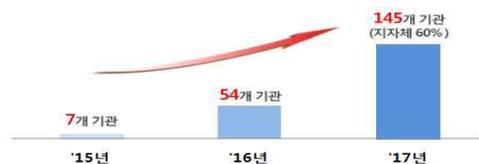
<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 >

5. 국민 소통 시스템 개선 및 국민의 소리 심층 분석·활용

□ 정부대표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110콜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 지자체 고충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을 확대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16년 54개→'17년 145개)

< 국민신문고 통합 지자체 수 >



○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기억하기 어려운 8자리 민원전화를 110콜센터와 연계 또는 통합한다.

- 국조실 주관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비정상적인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 국민의 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활용한다.
 - 민생경제·소상공인 등 서민 실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의 민원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 최근 4년간 민원이 대폭 증가한 분야를 중점 분석, 정책참고자료로 제공한다.

6. 권익구제 결정 사후관리 강화

- 권익위의 권고나 재결이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익위 결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심판 재결 이행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강제제도 도입 추진(행정심판법 개정안 '16.8월 국회제출) -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 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배상을 명령
제도개선·고충민원 권고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구축한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 • 고충민원 주요 불수용 기관 대상 '고충민원 전략회의' 운영 • 권고 미 이행 시, 언론 공표 확대와 국회 제안 등을 통해 이행 독려

- 권익위는 2017년 주요 정책과제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21.(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여,
 -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 ‘지자체별 경제현안 및 대응계획’ (17개 시·도)
 - ‘지역전략산업 추진현황’ (전라북도)
 -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검토’ (관계부처 합동)를 논의하였다.
- 최상목 차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별첨) 2016년 시도경제협의회 모두발언

【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 연말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시·도 부단체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함
 - 오늘 시도경제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 】

-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생산과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가운데, 지난주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 공기업 투자 확대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예정임

- 또한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 소득 기반 확충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도 배가하는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임

【 지자체 당부사항 】

- 지자체에서도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정부의 경기보강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
- 우선, 내년 1월초부터 자금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자 공고 등 사전 재정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며,
- 지방공기업 등의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수요를 적시에 발굴하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한편, 전국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AI(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른 시일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감염경로 차단과 방역시스템 강화 등에도
중앙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람
- 무엇보다 농장단위 1차 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차량소독·이동통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농가들의 적극 협조를 유도해 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기 제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14개 시·도에 향후 5년간
약 17만명의 고용과
약 14조원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14개 지자체 추정
-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여야 국회의원들에 법 통과를 당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전략산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법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음
- 각 지역에서도 국회의원들께 법안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지역전략산업 관련 투자유치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맺음말씀 】

- 지금처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인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봄
*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찌어야 한다는 뜻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해야 일이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
- 오늘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아이디어와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 말씀해주시는 사항은 검토를 거쳐
내년도 경제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전문가와 함께 한 번에 종합적 점검으로 안전한 학교 조성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및 컨설팅』을 2월부터 6월말까지 전국 총 2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스톱(one-stop) 점검은 학교안전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번에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즉석에서 컨설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실험실, 유해물질, 교통, 기타 안전 등
-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one-stop) 점검은 전문가들이 학교를 점검한 후 관리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학교 현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 '15년(68개교) → '16년(180개교) → '17년(200개교)
 - ** '16년 원스톱(one-stop) 점검 설문조사 결과(학교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98%)
- 특히, 점검 후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주요 미흡사례*에 대한 점검 사례집** 제작·배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안전 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 * 주방화재용 전문 소화기(K급 소화기) 교체, 화재경보장치 울림 고의 차단, 가스배관 부식 등
 - ** 점검사례집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에 탑재하여 각급학교에서 공유 가능

□ '17년 원스톱(one-stop) 점검은 '16년 점검 시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점검대상(180→200개교)과 점검기간(2→4개월), 지원 예산(3→5억원)을 확대하고, 전문가 점검반 편성**을 지원하는 등 현장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 전문가 섭외 및 점검기간(일정 조정 등) 문제점, 예산지원 확대 요청 등

** 6개 권역별(중앙, 수도권, 중부권, 경남권, 호남권, 경북·제주권 등)로 전문 점검팀(분야별 2~3명)을 구성하여 시·도교육청 점검 지원

○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안전 취약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분야별 학교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예정이다.

□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전문가가 한 번에 진단하고 처방하는, '원스톱(one-stop)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취약학교 집중관리 및 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17년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및 컨설팅 추진 요약

□ 개요

- 학교안전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번에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컨설팅 지원('17년, 5억 원)

□ 주요 내용

① 기관별 역할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문가 점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 점검 기본계획 수립 - 전문 점검팀 구성·운영(공제회) - 기관별 역할 부여 -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 점검 추진계획 수립 - 점검 대상학교 선정 - 원스톱 점검 추진 관련 행정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스톱 점검 전문가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점검결과 보고 -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시
'17. 1월 1주 ~ 1월 4주	계획수립 : '17. 1월 5주까지 점검실시 : '17. 6월 5주까지	'17. 2월 1주 ~ 6월 5주 중간보고 : '17. 4월 결과보고 : '17. 7월

- (교육부)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전문 점검팀 구성·운영
 - 원스톱 점검 결과 미흡시설 개선 예산지원
- (시·도교육청)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세부추진계획 수립
 - 원스톱 점검 대상학교 선정(각 시·도교육청 11~13개교)
 - 원스톱 점검반 편성(전문팀 포함), 점검 일정 조율 등 점검 추진
 - 특교 지원(소규모 수선 등)으로 개선하지 못한 미흡시설 개선
- (전문가 점검팀)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6개 권역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유해물질, 실험실, 교통, 기타안전 등) 전문가 점검팀 구성(권역별 한 분야에 2~3명으로 구성)
 -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결과 취합 및 보고서 작성
 - 학교 안전관리 점검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시(학교급, 규모 등 고려)

참고 2

'16년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주요사례

건축 분야

- ☞ 건물 외벽(조적벽), 구조물(바닥균열 부위) 등 관리 미흡
- ☞ 옥상 안전난간 및 계단 난간 높이 미흡
- ☞ 학교 건축물대장 관리 미흡(현행화 필요)

소방 분야

- ☞ 소화기 노후 및 관리 미흡, 주방화재용 전문 소화기(K급 소화기) 교체
- ☞ 방화문·펌프 노후화, 자동폐쇄차단장치 및 펌프실 관리 철저 필요
- ☞ 송수구, 상수도 등 소화전 주변 관리 미흡, 옥내소화전 관창 교체
- ☞ 화재 경보장치(주경종 및 지구경종)의 울림 고의 차단

전기 분야

- ☞ 누전차단기 미설치 및 용량과다에 대한 조치 필요
- ☞ 규격 전선 미사용, 옥외 케이블 부식, 분전반 잠금장치 및 위험표지판 미설치
- ☞ 콘센트 미고정 및 탄화, 배선기구 노후, 안전점검 결과 기록유지 미흡

가스 분야

- ☞ 가스배관 부식 및 도색, 중간밸브 파손·불량
- ☞ 가스 경보기 작동 불량, 미사용 배관 방치, 배기가스 누설 우려(온풍기)
-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유지관리 미흡

환경 분야

- ☞ 천장 텍스 파손, 환기창 부족, 환기 조건 열악
- ☞ 교내 시설 청소 부족, 식수대 주위 위생 관리 미흡
- ☞ 우레탄, 인조 잔디 운동장 사용 시 중금속 노출 우려

실험실습실

- ☞ 실험실 적정 보호구, 물질안전보관자료(MSDS) 미비치
- ☞ 실험실 세안기 미설치, 화학흡후드 미설치에 따른 유해가스 흡입 우려
- ☞ 미사용 시약 장시간 보관 등 화학약품 관리 미흡
- ☞ 학생 및 모든 교사 대상으로 실험실 안전교육 필요

교통·기타 분야

- ☞ 학생 등·하곳길 불법주차 차량 및 통행로 차도 미 구분
- ☞ 안전시설물 미설치(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등)
- ☞ CCTV 화소 조정, 관제장소 부적절, CCTV 안내판 미부착
- ☞ 미끄럼 방지시설 미설치, 교내 무단주차 차량으로 소방로 미확보

미래부, 대학 창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대학 내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대학을 기술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키로 해 -

◇ 2017. 1. 23.(월), 15:00~16:30 개최

◇ 대학 내 창업 관련 교육·지원 시설들을 방문하고 대학 중심의 창업 붐 조성을 위한 창업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1월 23일(월) 오후 3시 서울시 안암동에 위치한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를 방문하여 대학이 창업자 또는 대학發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대학 내 창업지원조직 관계자, 대학發 창업기업 대표, 예비창업자 등 창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정부는 세계적 저성장 기조 속에 '창업'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창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일부 대학에서는 우수 인력과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학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특히 고려대학교는 작년 9월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학 내 학생 창조 전용공간(파이빌 : π -vill)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24시간 개방하는 등 학생들의 창의·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또한 'KU 스타트업 강좌'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대학 내 '스타트업연구원'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하고 인큐베이팅(incubating) 하는 등 창업 네트

워킹 거점 마련에 힘쓰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예비 창업자와 학교發 창업기업 대표들이 대학 내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대학이나 정부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탄없이 말하는 자리가 되었다.
- 어느 대학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전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기도 하고, 창업학생을 위한 기술료 인하, 스타트업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 지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와 학생 창업팀과의 연계, 정부 보유 시설과 정보들을 학생창업자에게 적극 공개 등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와 건의사항이 이어졌다.
- 미래부는 이번 간담회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창업 관련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매월 개최되는 ‘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창업 붐(Boom) 지속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최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최고(High-End) 고부가가치 창출 영역인 ‘기술창업’은 여전히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이와 관련하여 미래부는 대학發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을 확산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가칭)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을 기획하고 하반기 중에 시범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학 중심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대학 또한 그동안 축적한 지식과 역량을 청년들의 열정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며 “이제는 대학이 교육 및 연구 활동과 함께 창업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 1. 대학발 창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계획 1 부.
2. 현장방문 및 간담회 참석자 명단 1 부.
3. 방문시설 개요 1 부.
4. 현장방문 사진(대변인실에서 행사 직후 일괄 배포) 1 부.

붙임 1 대학發 창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계획

□ 목 적

- 대학이 우수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대학 중심 창업 붐 조성을 위한 의견 청취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계획(안)

- 일시 : '17. 1.23.(월) 15:00~16:30 (90분)
- 장소 :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 참석자 : 장관, 고려대 총장 등 20여 명
 - 창조경제조정관, 연구개발정책실장, 대변인, 미래인재정책국장 등
 - 연구부총장, 산학협력단장, 경영대학장, 창업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1) 대학 창업 활성화 관련 시설 방문
 - * KU 개척마을(파이빌), 스타트업연구원, KU 스타트업 강좌(11개) 소개 등
 - 2) 대학 내 창업 관계자 간담회
 - * 창업지원조직, 예비창업자(학부생, 대학원생), 기술지주회사·스타트업기업 CEO 등

□ 세부일정(안)

시 간	상 세 내 용	비 고
14:40~14:55 '15	영접 및 환담 - 총장, 연구부총장, 산학협력단장	창조조정관, 연구실장 (본관 1층 접견실)
14:55~15:00 '05	이동(본관 → 정경대학)	-
15:00~15:25 '25	'KU 개척마을(파이빌)' 시설 방문 - 파이빌 현황 보고 및 KU 스타트업 강좌 소개 - '기술기반 벤처기업 육성 전략 세미나' 참관	정석 파이빌 총장 (4층 오픈플랜 스튜디오) (2층 다목적홀)
15:35~15:50 '15	'스타트업연구원' 시설 방문 - 스타트업연구원 운영 현황 보고	정호원 연구원장
15:45~16:30 '45	대학 창업 관계자 간담회 - 창업지원조직,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CEO 등 - 간담회 직후 기자단 Q&A	사회 : 정호원 원장 (2층 스타트업 스테이션)
15:25~15:35 '10	이동(정경대학 → 경영대학)	-

□ **참석자 명단**

연번	구 분	소속기관	직 책	성 명	비 고
1	국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 관	최양희	
2			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3			연구개발정책실장	이진규	
4			대변인	전성배	
5			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6			미래인재정책과장	허재용	
7	대학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간담회 불참
8			연구부총장	김수원	
9			산학협력단장	고제상	
10			경영대학장	권수영	
11			스타트업연구원장	정호원	
12			파이빌총장 (기계공학부)	정 석	
13	창업CEO 창업지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스트롱 홀드	우종욱	
14		창업보육센터	과장	전영민	
15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심경수	
16	대학원생	스타트업 '일리오'	대표	백인식	창업보육센터
17	학부생 졸업생	스타트업 '용감한'	대표	오연주	스타트업 연구원
18		스타트업 '브로 피트니스'	대표	지창대	창업보육센터
19		스타트업 '뽕득'	대표	박노준	

□ **KU 개척마을(파이빌)**

○ **파이빌(π -vill)**

- '개척자'를 의미하는 영어 'Pioneer'의 첫 글자를 원주율의 상징으로 쓰이는 그리스 알파벳 파이(π)로 표기하여 지음
- 끝없이 계속되는 원주율처럼 우리의 창의와 개척이 끊임없이 뻗어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음

○ **시설현황**

- 건축면적 539.7m²(163.19평), 연면적 999.04m²(302.21평, 지상 5층)
- 용도 : 교육연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주요시설(38개 컨테이너로 구성) : 강의실, 스튜디오(16개), 오픈플랜 스튜디오, 아이디어 카페, 3D 프린터 오픈랩 등
- 소요예산 : 약 21억 원
- 이용현황 : 현재 17개 대학생 입주(이용기간 : 3개월, 연장가능)
- 이용료 : 사용료, 관리비 등 전액 무상 이용

○ **운영현황**

- 고려대 창업보육센터와 4개 창업팀 연계, 멘토링 등 지원
- 자체 학생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자치
- 기술지주회사, 변리사(산학협력단 직원), 회계사 등이 매월 2회 상담 및 멘토링 지원

□ 스타트업연구원

○ 창업 역량 강화 교육

- 월 1회 이상 기업가 정신, 혁신, 창업실무 등을 주제로 특강

- * 소프트뱅크벤처스 문규학 대표(기업가 정신으로 거듭나라 고대여!)
- * 본엔젤스파트너스 강석훈 대표(스타트업 경영 - 운영과 전략)
- * 이큐브랩 권순범 대표(스타트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 및 성장 전략)
- * JYP 정욱 대표(KPOP의 성장과 창의적인 인재)
- * 아마존웹서비스 윤석찬(AWS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성장 곡선)
- * 구글 박중혁(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영상 마케팅 사례와 스타트업을 위한 유튜브 활용 전략 제시)

○ 창업경진대회 개최 : 연 2회 실시, 입주기업 선발

- 최우수상 : 500만 원, 우수상 300만 원, 장려상 100만 원

- * '16년 여름 : 4개국, 23개 대학, 총 43팀(155명) 지원, 3팀 수상(6팀 입주)
- * '16년 겨울 : 3개국, 16개 대학, 총 43팀(156명) 지원, 4팀 수상(9팀 입주)

○ 입주 지원 : 무상 공간 지원(최대 1년), 현재 15팀 입주

○ 창업네트워크 제공



1년 먼저 만나는 평창올림픽, 강원도 겨울문화축제 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강원도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G)-365일('17. 2. 9.)을 전후한 2월 동절기 동안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개최도시 대표 겨울문화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겨울문화축제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인 평창, 강릉, 정선에서 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펼쳐지는 마지막 테스트 성격이면서도 평창 황병산사냥놀이, 강릉 단오제, 정선아리랑 등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와 재즈·클래식, 무용·마술, 랩·판소리 등 다양한 현대적 복합공연을 기반으로 눈과 얼음, 음식축제 등을 담은 융합된 종합문화축제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오륜 눈조각 전시와 체험, 대관령눈꽃축제에서

2월 3일(금)부터 12일(일)까지 10일간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우리는 겨울에 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으로 간다'는 슬로건과 함께 '대관령 눈꽃축제'가 열린다. 지역 전통문화인 황병산 겨울사냥놀이, 평창 지역청소년 연합 오케스트라 공연, 평창군 7개 민속 보존회가 참여하는 평창윈터퍼레이드 등 다양한 지역 대표 콘텐츠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와 평창군 대표문화인 상원사 동종, 이효석, 양, 한우를 주제로 한 오륜기 눈 조각 전시, 동계올림픽 종목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올림픽 참가국 먹거리음식과 평창관, 한국관 등 다양한 음식과 재즈 및 록 밴드 공연이 더해져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눈과 입을 즐겁게 할 계획이다.

강릉시민 2018명이 참가하는 대형 길놀이 공연도 열려

강릉시에서는 2017년 2월 14일(화)부터 19일(일)까지 6일간 강릉대도호부 관아와 명주로 일원에서 '길 위의 신명, 올림픽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강릉 겨울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강릉 겨울퍼포먼스 페스티벌'은

▲시민 2018명이 참가하는 대형 길놀이 공연, 관노가면극 등으로 이루어진 거리공연 퍼포먼스, ▲탭댄스와 국악, 마술과 무용 등으로 구성된 장르 간 복합 현대예술 공연 퍼포먼스, ▲전통혼례 시연, 남사당, 강릉농악, 강강술래 등 다채로운 국가무형문화재 공연으로 신명을 풀어내는 전통연희 공연 퍼포먼스 등 3개 퍼포먼스로 펼쳐진다. 축제 기간 중 강릉지역 2018 특선메뉴 10선도 맛볼 수 있다.

평창의 설경에 수놓은 클래식과 재즈의 선율, 평창겨울음악제!

동계올림픽 개최 중심부인 평창 대관령 설원에서 지난겨울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평창겨울음악제'가 2월 15일(수)부터 19일(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2월 15일(수) 본 음악제의 예술감독인 정명화와 명창 안숙선이 선보이는 특별한 협연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재즈연주자인 비즐리가 선보이는 다양한 재즈무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의 젊은 연주자들의 클래식, 클래식·재즈 협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정선에서도 지난겨울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고드름축제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작되어 2월 4일(토)까지 아라리락(樂) 콘서트, 얼음축구 등 겨울테마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주체 측 추산 4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올림픽홍보관에서, 대회 기간 정선에서 열리는 알파인 경기를 집중 홍보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펼쳐지는 이번 겨울문화축제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에도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해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강원지역 문화축제로 발전하여 동계올림픽 축제유산으로 남겨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 사업별 행사 계획

<붙임>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 사업별 행사 계획

1. 대관령눈꽃축제

.올림픽 개최도시 전통문화와 눈꽃축제의 장점을 살린 겨울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경기 관람객에 대한 풍성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올림픽 개최도시 이미지 부각

- 기 간 : 2017. 2. 3.(금) ~ 2. 12(일), 10일간
- 장 소 : 평창군 송천 일원
- 내 용 : 올림픽존, 스노우체험존, 투게더존 등 운영

【 프로그램 구성 】

테 마	프 로 그 램
올림픽존	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 올림픽종목 체험(크로스컨트리, 컬링)
스노우존	평창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올림픽을 주제로 눈조각 공원 조성, 대표프로그램 올림픽오류기 공간형 5개 테마 눈조각 전시(문화재-상원사동종, 인물-이호석, 고원문화-양, 음식-한우, 올림픽-마스코트), 눈미로 체험 눈캔들 터널, 눈 카페, 전통놀이, 야간프로그램 등
투게더 존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눈사람만들기, 설피만들기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 각종 이벤트 진행
기타행사	개막식, 만설제, 국제알몸마라톤대회, 눈꽃 가요제 등
평창스토리	황병산 겨울 사냥놀이, 평창 청소년 연합오케스트라 공연, 평창 윈터퍼레이드 등
세계길거리 음식 페스티벌	세계8개국 유명 길거리음식, 강원도 전통음식, 초대형 구이마당, 야간 맥주파티 운영 등

눈꽃축제장/공간형 테마 눈조각 전시	올림픽 홍보관 운영
	



2. 강릉 겨울퍼포먼스 페스티벌

.특구 올림픽축제를 지속가능한 예술축제로 유산화 하고, 도심형 축제로 추진
 .지역 활성화 도모, 경쟁력 있는 퍼포먼스 중심의 공연관광 축제로 육성

- 기 간 : 2017. 2. 14.(화) ~ 2. 19(일), 6일간
- 장 소 : 강릉시 명주동 일원 (대도호부관아, 명주로, 명주예술마당)
- 내 용 : 거리공연·현대예술공연·전통연희공연 퍼포먼스, 지역문화 콘텐츠 등

【 프로그램 구성 】

구 분	프 로 그 램	공 간
거리공연 퍼포먼스	명주동 행사장 길놀이 퍼포먼스 → 행사를 알리는 봄업조성	명 주 로
	명주로 거리공연 콜라보 퍼포먼스 → 청소년 댄스천하, 전통 강릉연희 공연	명 주 로
	명주로 대형 MOON 火 (달&불)퍼포먼스 → 2018명 참가 대형 길놀이 공연	명 주 로
현대예술공연 퍼포먼스	우수공연팀 초청 무대 → 국내외 경쟁력 있는 공연팀 초청 기획공연	명주예술마당 특설무대
	명주 나이트 콘서트 → 차별화되고, 업선된 프리미엄 콘서트 무대	명주예술마당 명주콘서트홀
	시민 참여무대 → 집객 취약시간대 활용 지역 커뮤니티 공연	명주예술마당 특설무대
	프로젝트 퍼포먼스 → 지역예술의 창의적이고 역량을 보여주는 무대	명주예술마당 특설무대
전통연희공연 퍼포먼스	화룡점정·강릉의 아리랑 → 전통연희 콜라보 프로젝트 무대	명주예술마당 특설무대
	전통연희 퍼포먼스 → 무형문화재 공연 / 대도호부관아 무대공연	대도호부관아
	전통혼례 퍼포먼스 → 전통혼례 시연으로 축제를 여는 행사연출	대도호부관아
지역문 화 컨텐츠	강릉 콘텐츠 마켓 - 아트마켓, 커피, 음식축제 지역문화 전시 판매	명주예술마당
	명주동 임만혁로드 - 설치미술, 거리벽화, 상가참여 문화체험 운영	명주동길
	대도호부관아 잔치마당 - 전통연희 디도, 도베레, 먹구미, 잔래놀이, 소원지, 조형물 등	대도호부관아

콜라보 퍼포먼스	우수공연팀 초청공연
	
석전놀이 퍼포먼스	길놀이
	

3. 평창겨울음악제

.동계올림픽 계기 겨울축제 및 음악을 연계한 고품격의 겨울국제음악공연 상설화
 .올림픽이 남긴 문화유산으로서 지속적 육성을 통한 세계적 명품 음악제로 도약

- 기 간 : 2017. 2. 15.(수) ~ 2. 19(일), 5일간
- 장 소 : 알펜시아(콘서트홀) 및 강릉 올림픽파크 특설공연장 등
- 내 용 : 클래식 콘서트4회, 재즈콘서트 6회
- 예술감독 : 정명화, 정경화(※ 대관령국제음악제 공동 예술감독)/ 예술부감독 손열음

【 공연 일정 】

행사명	일자	시간	장소	출연진 및 내용
개막공연(협연)	2.15 (수)	18:00	콘서트홀	오프닝 스페셜(재즈1&클래식 I) - 정명화(첼로)&안숙선(판소리) - 존 비즐리 (솔로) - 앤더슨 & 로 (피아노 듀오)
재즈콘서트	2.16 (목)	19:30	콘서트홀	재즈 콘서트2 - MONK'estra, 웅산밴드
클래식콘서트	2.17 (금)	17:00	콘서트홀	클래식 콘서트II - 매기 피니간(소프라노), 김상윤(클라리넷), 임지영(바이올린), 이상 엔더스(첼로), 이한나(비올라), 손열음(피아노), 김규연(피아노)
재즈콘서트	2.17 (금)	21:00	콘서트홀	재즈 콘서트3 - 존 비즐리 7인조 밴드
재즈콘서트	2.17 (금)	19:00	강릉 올림픽파크 특설공연장	재즈 콘서트 - 이지연 컨템포러리 재즈 앙상블(지브리 애니메이션 in Jazz)
클래식콘서트	2.18 (토)	15:00	콘서트홀	클래식 콘서트III - 원주시향(지휘:김광현)&손열음(피아노), 임지영(바이올린), 이상 엔더스(첼로), 매기피니간(소프라노)
재즈콘서트	2.18 (토)	21:00	콘서트홀	재즈 콘서트4 - 3 Brave Souls
클래식&재즈 콘서트	2.19 (일)	11:00	콘서트홀	클래식IV&재즈5 - 매기 피니간(소프라노), 김상윤(클라리넷), 김규연(피아노) - 존 비즐리 (솔로 리사이틀)

앤더슨 & 로(피아노 듀오)



존 비즐리-몬케스트라 연주



4. 정선고드름축제

.정선의 고유한 문화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화된 겨울축제 개발
 .정선아리랑 및 정선5일장을 접목한 겨울 문화.관광체험 축제로 차별화 추진

- 기 간 : 2017. 1. 20.(금) ~ 2. 4.(토), 16일간
- 장 소 : 정선읍 조양강변 일원
- 내 용 : 개.폐막식(군립아리랑예술단), 주제 및 서브프로그램(8개 부문 24개 세부 종목)

【 프로그램 구성 】

테 마	프 로 그 램
의식	개막식 및 개막공연(눈꽃놀이 난장:군립 아리랑예술단), 폐막식 및 폐막공연(아라리오:락 오페라 콘서트)
공연	아리랑 콘텐츠 극 축제(K-culture) / 4회 생활문화동호회 공연, 우리동네 노래잔치 / 6회 제2회 정선 겨울음악제 / 2회, 길거리공연
대회	얼음축구대회, 얼음줄다리기대회, 설피계주대회
겨울 테마	송어 겨울낚시, 맨손송어잡기, 눈썰매, 연날리기, 겨울 스케이트, 눈 놀이동산, 눈썰매장, 설상 ATV
조형	눈사람, 물갈대숲 정원, 고드름터널 및 울타리
전시 홍보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 홍보관(정선아리랑, 정선여행, 정선관광, 중봉경기장 홍보)
먹거리	정선음식 10선 체험관, 향토음식 난장, 겨울송어 회센터
기타	이동식 철도박물관, 문화마당, 품물시장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대 !

- 환경보전 효과가 큰 유기농 중심으로 친환경 실천면적 증가 -

《 주 요 내 용 》

◇ 촘촘한 인증관리로 친환경농업 질적 성장 전환

* 유기농/전체인증면적(천ha) : ('14) 18/83 → ('15) 18/75 → ('16) 20/79

◇ 인증관리 강화, 생산자 교육 확대 등 유기농업 기반 구축 추진

* 인증농가조사 확대(%) : ('16) 20 → 30 / 유기농업 교육·훈련제도 도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2013년 이후 위축되던 국내 친환경농업이 지난해에는 환경보전 효과가 큰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증관리를 강화해온 결과로 부실인증 및 인증기준 위반행위가 크게 감소하여 전체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 유기농/전체인증 농가수(천호) : ('14) 12/68 → ('15) 12/60 → ('16) 13/62

* 유기농/전체인증면적(천ha) : ('14) 18/83 → ('15) 18/75 → ('16) 20/79



- 또한, 농관원은 인증기관의 심사 업무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심사보고서의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 생산자와 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인증을 포기하거나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감소하면서 인증갱신 비중이 크게 확대('13년 40% → 75)되고 있다고 밝혔다.
 - * 심사업무조정 : (심사) 연 500호/1인 → 400, (심의) 무제한 → 일 15건/1인
 - * 교육 : (생산자) ('15) 1,403명 → ('16) 2,353, (심사원) ('15) 275 → ('16) 835
- 이 외에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인증관리 과정에 소비자 참여·홍보를 확대('15년 5천명 → 7)하고,
 -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 안심유통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3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만족도 : ('14) 61.6 → ('15) 64.3 → ('16) 67.6
- 올해 농관원은 6월에 시행되는 민간 인증체계에 대비하여 인증관리 강화, 소비자 교육·홍보, 생산자 유기농업 교육 등 신뢰·소비·육성의 안정적 성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우선, 인증업무의 민간기관 이양에 대비하여 부실인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실태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지조사를 강화('16. 민간 인증농가 20% → '17. 30)하고, 생산자 교육('16. 2천 명 → '17. 33)과 소비자 교육·홍보('16. 7천 명 → '17. 9)를 확대하여 신뢰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 또한, 인증기관의 운영실태 평가·등급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17.6)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마련과 시범평가를 추진('17.상)하여 '18년부터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평가결과를 공표('18.7)하고, 우수인증기관을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정부(농식품부·농관원)는 신규와 무농약 인증 농가가 유기농업의 철학과 농법을 배우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유기농업 교육·훈련제도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 유기농업 교육·훈련제도 도입 : 법 개정안 마련('17.2.) → 시행('18.7.)

□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하는 것은 물론,

○ 민간인증기관의 등급평가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증기관이 집중 육성되도록 관리하고,

○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 진입단계부터 유기농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

○ 신뢰·소비·육성의 선순환 체계에 따라 친환경농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성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유기합성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생산되도록 친환경농업 육성

□ (목적)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 가능한 농업 추구,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관리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

□ 인증종류 및 기준

- 유기농산물 : 윤작·토양관리 이행, 농약·화학비료 사용금지(3년 이상)
- 무농약농산물 :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기준의 1/3이하 사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 인증신청기관 : 민간 인증기관(66개소, '16.12.), 농관원('17.6. 중단)

* 민간기관 인증비율(농산물) : ('13) 77.2% → ('14) 75.5 → ('15) 83.0 → ('16) 94.0

- (인증심사) 경영관련자료, 생산계획서 등의 서류와 재배포장·용수,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적합성 여부 확인
- (인증승인) 서류 및 현장심사와,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처리기간 : 50일)

□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 생산농장 및 판매장에 대해 수시·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 준수여부, 非인증품 둔갑판매 등 조사

참고 2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 연도별 인증 현황

구 분		'11	'12	'13	'14	'15	'16
전체	농가수(호)	103,141	107,058	103,949	68,389	60,018	61,946
	면적(ha)	114,564	127,124	119,443	83,367	75,139	79,479
유기	농가수	13,376	16,733	13,957	11,633	11,611	12,896
	면적	19,311	25,467	21,206	18,306	18,143	19,862
무농약	농가수	89,765	90,325	89,992	56,756	48,407	49,050
	면적	95,253	101,657	98,237	65,061	56,996	59,617

* 농관원/민간인증기관 인증비율('16.12. 현재 인증면적) : 6%/94%

< 16.12. 현재 기준 전체 농산물 대비 점유비율 >

구 분	유기·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농가	면적	생산량	농가	면적	생산량	농가	면적	생산량
점유비율(%)	5.7	4.7	5.9	1.2	1.2	1.2	4.5	3.5	4.7

* 전체대비 기준('15통계): 농가수 1,089천호, 면적 1,679천ha, 생산량 18,036천톤('14.)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 및 농가수>

□ '16년 지역별 인증 현황

구 분	합계		유기		무농약	
	농가수(호)	인증면적(ha)	농가수(호)	인증면적(ha)	농가수(호)	인증면적(ha)
서울	67	12	4	-	63	12
부산	98	56	1	1	97	55
대구	181	99	12	7	169	92
인천	285	447	72	114	213	333
광주	362	336	9	9	353	327
대전	38	11	5	2	33	9
울산	126	111	4	27	122	84
세종	82	119	17	40	65	79
경기	5,222	5,024	1,176	1,702	4,046	3,322
강원	2,892	4,283	763	1,653	2,129	2,630
충북	4,018	3,607	900	922	3,118	2,685
충남	4,976	6,100	1,899	2,579	3,077	3,521
전북	5,211	6,799	1,130	1,947	4,081	4,852
전남	26,342	39,940	4,010	6,567	22,332	33,373
경북	5,503	4,909	1,112	1,199	4,391	3,710
경남	5,399	5,217	1,454	1,673	3,945	3,544
제주	1,144	2,409	328	1,420	816	989
합계	61,946	79,479	12,896	19,862	49,050	59,617

2017년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접수 시작

- ◇ 2월 1일부터 7일간 접수, 인터넷 접수 외에 현장 접수 추가
- ◇ 물질약전문업(WASCO) 지원, 수출·고용실적 우수기업 우대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올해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을 2월 1일부터 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2017년 환경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총 2,453억 원이며, 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접수한다. 1분기 환경정책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72%가 적용된다.
- 이번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은 기존의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함께 진행해 기업들의 편의를 높였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시스템에서 직접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현장 접수는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층 산업육성2실에서 받는다. 사업 담당자가 환경정책자금 신청 절차부터 승인 후 융자금 인출방법, 공사 완료 후 제출서류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 올해 환경정책자금의 환경개선자금(총 620억 원) 융자대상에는 물질약전문업(WASCO: Water Saving Company)이 새롭게 추가됐다.
 - 물질약전문업은 수자원 낭비를 줄이고 물 절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수도시설 개선에 먼저 투자하고 이후 절감된 상하수도 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특성 때문에 초기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 이 외에도 용자 심사순위 평가체계에 고용·수출지표를 신설하여 우선 심사권을 부여하고, 고용·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 상향 등을 적용한다.
- 아울러 환경산업육성 해외진출자금 지원범위를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불인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범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현장의 수요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국내 환경시장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2017년도 환경정책자금 사업 개요.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 **사업목적**

- 중소 환경산업체·재활용업체에 시설설치 및 경영안정 자금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환경산업 및 재활용산업 육성
-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으로 국가 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환경보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방식 및 지원형태 : 간접대출
 - ※ 기술원의 융자승인 후 은행의 채권보전(담보심사)이 완료되어야 대출가능한 방식
- 지원대상
 - 환경산업육성자금 : 중소 환경산업체
 - 환경개선자금 : 일반 중소 산업체(오염방지시설 분야는 중견으로 확대)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중소 재활용업체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 사업자
- 융자규모 : 총 2,453억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융자규모	합계	2,453	455	620	1,329	49
	시설	1,553	255	620	629	49
	운전	900	200	-	700	-

○ **지원조건**

자금	지원분야	세부분야	지원한도(업체당)	대출기간	대출금리
환경산업육성	시설	시설설치자금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7년)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17.1분기 기준 1.7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5년)	
		해외진출자금	2억원		
환경개선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50억원	3년거치 4년상환(7년)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			
재활용산업육성	시설	시설설치자금	25억원	3년거치 7년상환(10년)	분기별 변동금리 ('17.1분기 기준 1.7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5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	시설	시설설치자금	30억원	5년거치 10년 상환(15년)	

1. 환경정책자금이란 무엇인가요?

-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 환경 보전과 국민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환경산업체에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드리는 자금입니다.
- * 법적근거 : 「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자금 등의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3항

2. 융자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융자 지원 절차는 크게 융자신청, 융자 심사·승인, 융자금 대여, 사업진행관리, 사후관리 및 상환관리로 나뉩니다.



3. 융자신청 시, 취급 은행은 어디인가요?

- 시중 16개 은행(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 가능합니다.

4. 그간 환경정책자금 지원실적과 효과는?

- '16년 환경산업체 및 재활용업체 등 497개사에 2,159억원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1,888개사 대상 8,40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위: 개사, 억원)

구분	합계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합계	1,888	8,407	292	1,384	613	2,360	918	4,200	65	463
'12년	305	1,300	29	100	122	400	135	650	19	150
'13년	287	1,446	32	140	93	434	142	730	20	142
'14년	319	1,371	47	234	109	347	152	737	11	53
'15년	480	2,131	95	455	144	559	229	1,048	12	69
'16년	497	2,159	89	455	145	620	260	1,035	3	49

※ 기술원 운영: 재활용산업육성자금('11.8월 ~), 환경개선자금('12.1월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15.1월 ~)

- 또한 '16년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의 매출액이 '15년 대비 12.4%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 2017년 환경정책자금 접수 시기는?

- 1분기 접수 : 2.1 ~ 2.7
- 2분기 접수 : 4.3 ~ 4.7
- 3분기 접수 : 7.3 ~ 7.7
- 4분기 접수 : 10.10 ~ 10.16

※ 자금소진 상황에 따라 4분기 접수 미 실시 가능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및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상시접수

6. 2017년 환경정책자금 현장 접수처는?

- 주소 : (03367) 서울시 은평구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층 산업육성2실 '환경정책자금 현장접수처'
- 문의 : 02-2284-1739, 1733~1738

7. 고용·수출 실적 우수기업 혜택은?

- 심사순위 평가지표의 고용·수출 지표 신설로 우선심사를 통해 보다 빠른 융자금 대여 가능
- 수출실적 우수 시 해외진출자금 신청한도 증액(5억원 → 10억원)
- 고용실적 우수 시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증액(5억원 → 10억원)

- **환경정책자금** :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을 포괄하여 일컫는 용어
- **환경산업육성자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체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차차액 보전해주는 사업
- **환경개선자금** :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및 제56조, 「화학물질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오염방지시설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차차액 보전해주는 사업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체에 정부자금으로 재정융자하는 사업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국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비용을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재정융자하는 사업
-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융자금 대출일 해당분기의 고시 금리로 대출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며, 분할인출 시 각 분기 해당 금리 적용
- **분기별 변동금리** : 매분기 환경부 고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
- **물절약전문업** : 「수도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 절약을 목적으로 물절약전문업을 하려는 자가 자기자본을 우선 투입하여 물 사용자의 물이용 시설에 누수저감 또는 절수기 설치를 통하여 물 절약사업을 대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물 절감액으로 기 투입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 **물절약전문업자** : 물절약전문업을 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사업 관련 공금증, 한자리에서 해결하세요

- 2017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설명회 개최(2.3(금) 페럼타워) -

- 사회적기업 창업에서 협동조합 설립까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공금증을 한자리에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오광성, 이하 ‘진흥원’)은 2월 3일(금)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관련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 2017년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인증 지원, 판로 및 컨설팅 지원, 협동조합 지원 정책 등 진흥원의 주요 사업 일정과 지원 절차 등을 안내한다.
 - 설명회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오광성 원장은 ‘올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의 한 단계 도약이 요구되는 시점’ 이라고 하면서
 - ‘진흥원은 17년에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신규로 개소하는 등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할 수 있으며,
 - 당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업 설명회 자료와 주요 질의 사항 등을 사업설명회 종료 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2017년 진흥원 사업설명회 개요

I 추진 목적

- '17년 진흥원 주요 추진 사업 내용과 일정을 조기에 안내함으로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 정책 정보를 투명하게 개방·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부 3.0의 가치 실현

III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7.2.3.(금) 14:00 ~ 17:00
- 장 소 : 페럼타워 페럼홀 외 3개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 참 석 : 250명 내외(중간지원조직, (예비)사회적기업, 개인 등)
- Time Table

시 간	주 요 내 용 (안)	비 고
13:45~14:00	(15') - 참석자 등록	
14:00~14:05	(5') - 사회적기업 소개 동영상	
14:05~14:10	(5') - 인사말씀	진 흥원장
14:10~14:20	(10') - 기획관리본부 사업 소개	소관팀장
14:20~14:40	(20') - 협동조합본부 사업 소개	소관팀장
14:40~15:00	(20') - 창업육성본부 사업 소개	소관팀장
15:00~15:30	(30') - 판로지원본부 사업 소개	소관팀장
15:40~17:00	(80') - 사전 질의 답변 및 상담	분야별 상담장 이동

※ 질의응답의 경우 페럼타워 2층 세미나실을 활용하여 분야별로 나눠서 진행

20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창업·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2월 3일(금) 14:00 ~ 17:00
- 장소 : 페럼타워 3층 페럼홀(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 3, 4번 출구)
- 참석 대상 : 사회적기업 및 진흥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 주요 내용 : 2017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 소개, 사업 관련 질의 응답 및 상담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홍보팀 (031-697-7816)

● 프로그램 순서

시간	주요내용(안)	비고
13:45 ~ 14:00 (15')	참석자 등록	-
14:00 ~ 14:05 (5')	사회적기업 소개 동영상	-
14:05 ~ 14:10 (5')	인사말씀	진흥원장
14:10 ~ 14:20 (10')	기획관리본부 사업 소개	담당팀장
14:20 ~ 14:40 (20')	협동조합본부 사업 소개	담당팀장
14:40 ~ 15:00 (20')	창업육성본부 사업 소개	담당팀장
15:00 ~ 15:30 (30')	판로지원본부 사업 소개	담당팀장
15:40 ~ 17:00 (80')	사전 질의 답변 및 상담	페럼홀,세미나실 등

※ 참가신청서 접수시 관심 분야 선택 후 사전 질의 내용 기재
=> 분야별로 사전 질의 사항 전체 답변 후 상담회 진행(협동조합, 창업, 인증, 판로 및 컨설팅, 기타)

● 오시는 길

주소 : (0453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수하동, 페럼타워)



전국 76개 여성친화도시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프로젝트’ 추진

-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 시상식 및 16개 신규 지정도시 협약식 개최 -

- 남녀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3에 해당하는 76개소로 확대되면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 여성친화도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매5년마다 재지정)

↳ ('09) 2개 → ('10) 10개 → ('11) 30개 → ('12) 39개 → ('13) 50개 → ('14) 57개 → ('15) 66개 → ('16) 76개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1월 23일(월) 오후 3시 포스트타워(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에서 지난해 말 신규 지정된 16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하고, 우수기관 3곳*에 대해서도 시상한다.

※ 부산 사상구(대통령표창), 인천 부평구 · 경기 의정부시(국무총리표창)

-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서울 강동·서초·송파구, 울산 중구, 세종특별자치시 등 16개이며, 지난 2011년 지정됐던 부산 사상구,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등 14개 지자체도 그간의 성과와 새로운 추진계획이 인정받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구 분	지자체 명
신규지정 (16)	서울 강동구·서초구·송파구, 부산 동구, 인천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 경기 성남시·화성시·양주시, 강원 횡성군, 충북 충주시·증평군, 충남 서산시, 전남 순천시, 세종특별자치시
재지정 (14)	서울 도봉구, 부산 사상구, 인천 부평구,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 경기 안산시·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김제시, 경남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 새로 여성친화도시에 합류하게 된 지자체들은 여성친화적 협동조합과 같이 지역공동체도 살리면서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 강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지역행정에 참여하는 정책결정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프로젝트(계획)'를 추진하게 된다.
 - 특히, 서울 서초구는 '아버지센터' 운영, 경기도 화성시는 여성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No)-노(老)카페' 운영,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형 마을육아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으로 부산 사상구가 대통령 표창을, 인천 부평구와 경기 의정부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 부산 사상구(11년 지정, '16년 재지정)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희망기업'으로 선정하여 환경개선사업비 및 기업홍보 지원, 기업체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인천 부평구(11년 지정, '16년 재지정)는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49%)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서, '풀뿌리 여성센터'(13년~)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 교육과 지역 여성들의 네트워크(관계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풀뿌리 여성센터』 주요성과 : '하하호호 양성평등 교육극단 협동조합' 설립지원

- 경력단절여성 중 유아교사, 동화구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들로 영·유아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단을 구성하여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동화구연 및 종이인형극 공연을 통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
- 동 강사단은 '교육극단 협동조합'을 설립('16.6월)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 또한, 버스정류장이나 골목길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해 주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13년~)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경기 의정부시(12년 지정)는 일자리, 교육, 안전, 도로, 도시계획 등 거의 모든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여 양성평등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2009년 전국 익산시 최초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로 시행 9년차를 맞은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남녀노소 모든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가 계획하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반영되고, 더욱 많은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시상식 및 협약식 개요
 2.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문
 3. 정부포상 수상 지자체 주요 공적
 4. 지정 협약체결 여성친화도시 추진 프로젝트 소개
 5.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참 고

관련 보도자료 현황

배포 일시	제목	내용(요약)
2016. 12. 9.(금)	여성친화도시 전국 76개 지역으로 확산되다	- 2016년도 여성친화도시 신규·재 지정 심사결과 발표 : 서울 강동구, 경기도 성남시 등 16개 시·군·구 추가 지정

붙임 1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시상식 및 협약식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6. 1. 23(월) 15:00~16:50,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 참석 : 200여 명
 -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및 신규지정 자치단체장,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회원 등 민간인, 지자체 업무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정부포상 시상
 - 여성친화도시 협약서 서명 및 현판 증정, 자치단체장 발표 등

〈 2016년 정부포상 및 신규지정 여성친화도시 〉

- ▶ 정부포상(3) : 부산 사상구(대통령표창), 인천 부평구·경기 의정부시(국무총리표창)
- ▶ 신규지정(16) : 서울 강동구·서초구·송파구, 부산 동구, 인천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 경기 성남시·화성시·양주시, 강원 횡성군, 충북 충주시·증평군, 충남 서산시, 전남 순천시, 세종특별자치시

□ 행사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5:00~15:02	(02')	■ 개회 및 국민의례
15:02~15:05	(03')	■ 참석자 소개
15:05~15:10	(05')	■ 인사말씀
15:10~15:25	(15')	■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 시상식
15:25~15:55	(30')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15:55~16:35	(40')	■ 단체장 소감 발표 * 16개 지자체
16:35~16:50	(15')	■ 단체사진 촬영 ■ 폐 회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안전강화방안 마련 초고층건물 건축 시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국민 생명재산 보호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법령을 2월 4일(토)에 개정·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16. 5. 27. 총리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16. 2. 3. '17.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을 규정했다.
 - 이 밖에도 동물장묘업 용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다.
-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건축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 대비 건축물 대응력 제고

-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 [표]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하여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의 확대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형화된 소형(연면적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 또한,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하여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② 설계·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 연평균 약 20동 건축(3년 평균, '13년 15동, '14년 20동, '15 23동)

-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건축관계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기간 업무 정지될 수 있다.

○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이상이면서 1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 등, 16층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교육·노유자·운동·위락시설 등

□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시공 주요 단계에서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축물의 기초 및 지붕 배근을 완료하였을 때, 그리고 지상의 일정 층수(철근콘크리트구조는 5층, 철골구조는 3층)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완료했을 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3 기타 개정사항

- 이외에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등 관련 시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했다.

*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논의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6. 7. 7)

4 기대효과

-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해수부, 태풍 피해예방 위한 과학적 대응체계 강화한다

- 「태풍상황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2월부터 본격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태풍상황관리 및 모니터링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이 빈번하여 매년 약 329억 원 가량의 해양수산분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태풍 관련 정보가 지금까지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수집 및 분석 등 상황관리와 전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새로 구축한 시스템에서는 기상·해양 상황 관측 정보(예상경로, 파고, 조위 등)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관측된 정보와 과거 유사경로의 태풍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기상청에서 받은 태풍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시간대별 해일 높이 등을 추정하고 태풍의 유효반경 내에 있는 선박의 정보와 인근 해역의 현재 영상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태풍 발생시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박을 항구에 피신시키는 등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태풍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태풍 관련 정보를 전달받음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연구에 지속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태풍 상황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개요

- 목 적 : 재난유관기관간 태풍·기상·해양 등 관련정보 연계 및 공유를 통한 해양수산분야 태풍 피해 최소화
- 구축기간 : '16. 8. 26~12.30

□ 주요 기능

- (태풍정보 연계) 기상 및 해양 예·관측, 과거 태풍 이력(규모, 피해) 정보를 관련기관(기상청, 국민안전처, 국립해양조사원 등)으로부터 연계
- (태풍피해 예측) 태풍발생 후 국내 접근시 연계된 태풍정보를 토대로 피해 예측
- (피해예방 지원) 관측·예측 정보를 토대로 선박 피항 유도 등 신속한 재난의사결정 지원



<태풍 유효반경내 피해가능대상 조회>



<관련지역 CCTV 영상 조회>

□ 향후 계획

- 태풍상황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17.2~)
- 적조 등 해양수산관련 재난분야에 대한 시스템 확대 구축('17.1~'17.12)